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관광·건설 등 내수진작 초점... 핵심광물 공급망 전방위 지원

소비 활성화 통해 성장 촉진 건설업체 택지공급 규제 완화 일각선 건전재정 상충 우려도

기획재정부가 2일 내놓은 올해 경제 정책방향은 내수 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차량 출고가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내려 가구의 적극적인 자동차 매입을 꾀한다. 특히, 상반기에 6개월 한시적 조처라는 단서는 잠재 구매자의 마음을 조금더 자극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민간소비는 내수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성장률과 관련해, 계엄 사태 이후 더 급해진 정부입장에서 나름의 직효를 낸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구나 1년6개월 만에 시행되는 개세 인하다. 많은 이가 신차 매입 시기를 미루고 이 시점만을 기다렸을 지 모른다. 4000만 원대 차량을 70만 원쯤 싸게 살 수 있다니 고려해 볼 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여행비 지원에 공공택지 전매안화 등 내수부양 '올인'

정부가 근로자 여행비까지 일부 내준다고 했다. 근로자 1인이 20만 원을 적립할 시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소속 기업도 10만 원을 대주는 국내 지방여행 촉진책이다. 올해 예산이 어떨지 모르지만 국민과 지역상인 입장에서 가격 제한

정부 2025년 정책방향

목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대응, 경제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보강 강화, 민생지원 소비·건설 등 활력 제고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취약부분 맞춤형 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력산업 혁신 유망 신산업 등 경쟁력 제고 핵심인프라 확충 투자환경 개선, 중소기업 활성화
대외신인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외환시장 안정적 관리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 투자 촉진 잠재리스크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대외경제전략 추진 전략적 수출 지원 공급망 안정

자료: 정부 / 뉴시스 그래픽

임에 분명하다. 이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이 꼭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 부문 살리기에 나섰다. 시공을 원하는 업체를 위해 택지 공급과 관련한 규제를 푼다. 공공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을 완화해 택지 확보가 수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오를 대로 오른 건축 자재비다. 설상가상으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가격의 추락은 큰 약재다. 건설 부문에 약이 돼 온 금리 인하 등이 향후 호재일지 아닐지 따져볼 문제다.

이같이 소비회복의 지연과 건설경기 부진은 지난해 이후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돼 왔다. 특히 건축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탓에 주거용 건물 중심으로 불황 지속이 예측된다. 반면 토

목의 경우, 수도권 GTX·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사업 공사 실적이 반영되면서 감소 폭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 전문가들 예상이다.

◆ '불투명한 명제' 내수회복

전문가들은 올해 탄핵정국과 미 신정부 출범 등 내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환율이 지속되거나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깨질 수 있고 우려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에 "물가는 1%대로 올해보다는 좀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수는 환율 문제"라며 "환율이 높아진 상태가 오래가면 생산원가가, 유가가 오르면 정부가 전망하는 1%대가 깨질 수 있

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건설 경기는 부동산도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게 본다고 했다. 또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가 1월20일 출범하면 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통상정책을) 더 강도 높게 할지의 여부인데,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결국 국내 생산·설비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해외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내 경기문제는 여전히 어렵게 된다"라고 했다.

또 다른 교수는 "탄핵 정국에 소비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돼, 사이클(경기순환)의 바닥이 빨리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 진작을 위한 실효적 방안은 사실상 한계에 온 것 같다. 약간의 재정 확대와 세제만으론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내 생산지원 확대를 위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민관의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선 경제안보품목이나 서비스 관련 국내 공장을 신설 혹은 증설할 경우, 외국인투자자와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외투 현금 지원 우대 대상에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추가하고 지원비율을 최대 10% 포인트까지 가산한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비율 역시 소부장 특화단지 입주기업 수준인 2% 포인트(p)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아울러,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자금 패키지를 지원한다.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사업발굴 등 정보제공·컨설팅 및 대출·투자·보증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급망 기금 500억원을 활용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장기투자도 추진한다.

기재부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은 암울하다. 지난해 예측치(2.1%)보다 둔화한 1.8% 수준으로 2025 성장률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 1.9%, 한국개발연구원(KDI)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 보다도 낮다.

민간소비 및 건설 지원에 따른 세수 결손이 또다시 현실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올해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시 재원 마련 및 쓸 곳에 대한 근거·명시가 불분명하면 향후 세부족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올해 내수진작 정책과 건전재정 확보가 양립할 수 있을지 이목을 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유망 中企 100곳 선발... 정책자금 지원 등 중견기업 육성

벤처·스타트업에 2.5조 정책금융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규모 발행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2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도 마련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어치 발행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발해 오픈바우처, 정책자금, 제조시설 스마트화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도 만든다. '기업승계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법무부가 협업체 국가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사업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

소득공제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카드 금액 2025년 소득공제를 2배 이상 15%→30% *매출액 기준 1억400만원 이하
온누리상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 기간(1월10일~2월10일) 디지털 할인율 10%→15% 상향 온라인 전통시장관 이용시 5% 할인쿠폰 지급 디지털 결제액 15% 상품권으로 환급 *인당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13만원 상당 물품 구매시 4만원(30%) 할인 혜택 (구매 할인 2만원+환급 2만원) 사용처 확대 골목형 상점이 추가 지정 및 밀집조건 완화

자료: 정부 / 뉴시스 그래픽

화 전문회사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 모빌리티 등 초격차 10대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원천기술 사업화, 스케일업,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역 현장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도록

중앙-지자체가 예산을 공동 매칭·기획하는 지역 특화형 스마트공장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제조혁신에 힘을 실는다.

벤처 투자를 확대해 벤처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벤처·스타트업에 올해 2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면서다.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1분기 내 공고해 상반기 조기출자에 나선다.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5조5000억원 발행하고, 할인율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할인율은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설 성수기 한시적으로 카드형과 모바일 구매시 10%에서 15%로 상향 적용한다.

같은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도 신설한다.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 환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 '온라인 전통시장관' 이용 시 상품가격의 5%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된다. 정부는 골목형상점가를 90개 추가지정하고, 골목형 상점이 밀집조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이 사용처가 제한적이라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표준조례안을 배포해서 골목형 상점이 밀집 조건을 2000㎡당 30개에서 15개로, 특히 인구감소 지역은 10개까지 완화해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정부가 중점을 잡고 경제 심리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해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정책과제들이 빠르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인상 ▲백년가계 가업 상속공제 대상 포함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투자 임시대차제액공제 및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2025년 한시 적용)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 2배 상향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 통과가 필수"라면서 "여야가 조속히 협치해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